

201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서류 제출기한	2016년 1월 27일	
나이스 입력기간	2016년 1월 18일 ~ 1월 27일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직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발급)	전직원 제출
	③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④ 연금저축지급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⑤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⑥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⑧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직원 해당
나이스 나의 메뉴 조회 및 입력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파일명 '2014 년 연말정산 나이스등록방 법')	▶ (본인)근로소득 확인조회 : NEIS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 : NEIS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파일업로드(탭)	
	▶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인적공제 및 전체 공제내역 등록 기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저장→(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제출)	
	▶ 의료비공제 (NEIS입력) -(의료비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직접입력시 예시) 본인 10건, 자녀 20건, 부양가족 30건 등 여러 건의 의료비를 일일이 건별로 입 력하지 말고 본인의 총 건수는 본인 1건, 자녀의 총 건수는 자녀 1건, 부양가족 총 건수는 부양가족별로 별도 각각 1건으로 합한 금액을 입력	
	▶ 기부금공제(NEIS입력)-(기부금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만 등록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의료비지급명세 및 기부금명세 금액이 일치해야함	
기타사항	▶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2016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 ▶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연금저축,개인연금,신용카드 등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가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index.jsp)	

- ★ 연말정산 관련 문의 : 담당자 최은경 (내선번호 351, 전화번호 : 720-5351)
- ★ 기타 사항 :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7.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8:00 ~ 17:00)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배 우 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5.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5.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5.12.31. 이전 1995.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1998. 1. 1. 이후
추 가 공 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5.12.31. 이전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	×	○	
	교 육 비	×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1.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주의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1)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2)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3) ※ '06년 ~ '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4)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5)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7)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가) ※ 201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나) ※ 신용카드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4.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 이후부터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다) * 본인부담 상한액 : '15년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 : 121만원~506만원)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Q.3	근로자가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A.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30.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 ○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 입니다.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에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표본조사 대상 선정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2.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div>*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div> <div>-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div> <div>- 채무자와 저장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div> <div>※ 공제한도</div> <div>- '15.1.1. 이후 차입분</div> <div>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div> <div>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div> <div>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div> <div>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div> <div>-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div> <div>-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div> <div>-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div> <div><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div>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 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30%(2014년), 100%*·50%**·30%(2015년)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tr><th>구분</th><th>공제한도</th></tr><tr><td>'13년 이전 투자</td><td>종합소득금액의 40%</td></tr><tr><td>'14년 투자</td><td>종합소득금액의 50%</td></tr><tr><td>'15년 이후 투자</td><td>종합소득금액의 50%</td></tr></table>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div>- 15% 공제대상 사용금액</div> <div> · 신용카드 사용금액</div> <div>- 30% 공제대상 사용금액</div> <div>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div> <div>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div> <div>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div> <div>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div> <div>※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10% 추가 공제</div> <div>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20%</div> <div>-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div>							

항목	구 분		공제금액· 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tr><td>산출세액</td><td>공제금액</td></tr><tr><td>130만원 이하</td><td>55%</td></tr><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tr></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 공제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 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 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table><tr><th>구 분</th><th>의료비 공제금액</th></tr><tr><td>㉠<총급여액 3%</td><td>(㉠+㉡+㉢+㉣)－ (총급여액 3%－㉠)</td></tr><tr><td>㉠≥총급여액 3%</td><td>(㉠+㉡+㉢+㉣)+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td></tr></table>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아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 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 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생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 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대학생												
근로자 본인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 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특별 세액	기부금	정 치 자	10만원 이하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 3천만원 이하									

항목	구 분				공제금액· 한도	공 제 요 건	
공제			금 기 부 금	초과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 부금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 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 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 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 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 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 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